

20250823 식민통치의 수단으로서 교육?

#1_Intro

—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정준영입니다. 저는 식민지교육이라는 사례를 들어 20세기 초반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식민지로써 통치하고 또 유지하려고 했는 지의 문제를 ‘국가성’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식민교육의 문제는, 한국인을 강제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일본 식민지 통치의 강제성, 잔혹성, 비민주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역사적인 증거로서 많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꽤 친숙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한국인들이 이런 통치의 수단에 간단히 농락당했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그런 교육을 주도했던 식민통치의 담당자들도 상당수는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었던 같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식민통치자의 의도에 맞게 움직이는 듯 보일지 모르겠지만, 식민지교육의 제도적 영역의 안팎에서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진 수행주체들이 교육을 둘러싸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식민지교육의 사례야말로, 식민국가의 작동방식,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열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는 거칠게나마 그런 연구의 구상을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2

—사실, 이런 주제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사실 이러한 식민지의 상황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포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식민지교육은 식민통치 아래에서 작동하는 제도적 장이고, 통치자의 의도 뿐 아니라 피치자의 꿈과 욕망,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 등이 교차하는 영역이니깐요. 제 생각에는 이를 위해서는 식민통치의 작동방식 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요청됩니다. 개인적으로는 colonial state, 즉 식민국가가 이를 포착하는 적절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복잡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쉽사리 쓰기 어려운 개념이 되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일본의 식민통치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이었으며, 비정상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압 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선형적으로 설정해버려서는, 식민통치가 초래한 복잡한 현실이 너무 납작해지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국가’라는 관점의 제시를 통해, 당시 식민지배자 측이 표방했던 ‘국가성’에 대해서 이를 역사적 사실로 본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식민지사회에 이에 어떻게 대응/적응/순응/저항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출발점을 이룹니다.

#3

— 게다가, ‘식민국가’라는 관점은, 그 작동방식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과 갈등, 균열들, 그리고 그 틈새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활동의 자유도를 추구하며, 체계의 균열과 저항이라는 임무를 결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피식민자를 포함하는

식민지적인 수행주체들colonial agencies의 실천 및 그 실천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배의 다양한 차원 속에서, 순응 아니면 저항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는 여러 종류의 행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식민국가를 우회하거나 경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심지어 포스트콜로니얼의 문제, 식민 이후에도 계속되는 식민국가의 효과 및 그 극복의 과제도 부각됩니다.

#4

—이미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새삼 주목되는 것이 식민지교육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식민주의는 현지 주민의 ‘일본인화’를 강력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그 정책적 수단으로 ‘교육’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식민통치의 비판은 무엇보다도 식민교육에 대한 비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교육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었으며 그 자체로 반교육이었음은 물론입니다.

#5

—하지만 이 식민지교육의 문제를 각도를 바꾸어 ‘아래로부터’ 보면, 약간은 다른 풍경이 펼쳐 집니다. 그런 일방적인 교육이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도 만만치 않았고, 정책 집행자들도 이를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식민지교육이란 것이 다른 공공이론을 가진 수행주체들의 동상이몽의 영역이라면, 이를 그저 교육정책이나 학교제도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것으로는 한계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의 의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식민지 헤게모니를 획득하려는 프로젝트로 교육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6

—제가 ‘식민지 헤게모니의 획득’ 어찌고 말씀 드렸는데, 아마도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라나지트 구하의 저 유명한 저서, 실은 책 내용보다 제목이 유명한 저서, “헤게모니 없는 지배”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식민지에서 헤게모니적 지배의 불가능성을 논한 그 저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명제는 사실 좀 더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호미 바바의 이론을 빌자면, 식민지에서 헤게모니란 피식민자가 아무리 식민자를 잘 모방하는 듯 보여도, 애초 식민자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그 모방이란 끊임없이 “미끄러짐, 과잉, 차이” 등 역설적인 효과를 낳게 되기 마련이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애초 식민권력이 ‘동의’를 구하는 통치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식민국가는 지배의 안정적인 재생산 혹은 통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헤게모니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식민권력은, 그 성공여부와는 별개로, 피식민자들에게 자신을 ‘국가’로서 드러내고자 애씁니다. 물론, 식민지

헤게모니는 구하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완전한 동의든 완전한 강제든 궁극적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꿈이며 따라서 이를 추구하는 시도 또한 늘 양가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국가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헤게모니 없는 지배임을 스스로 폭로합니다.

#7

—그렇다면, 조선총독부의 식민지교육정책을 이렇게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새삼 다르게 보이게 될까요. 먼저, 식민교육정책의 의도와 관련해서 다른 측면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식민교육은 늘 그 의도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 비판은 정당합니다만, 그런 비판을 하지 않더라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국일본은 공식적으로 ‘조선이 식민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직 시세時勢가 좋지 않고 민도民度도 충분하지 않아서 메이지헌법을 적용하지 않는 외지外地가 되었을 뿐,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조선인은 언제쯤 일본인이 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식민 권력이 동화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스스로의 소멸을 지향한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강력한 폭력 장치와 두터운 관료제로 구축된 식민국가가 과연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 관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이 목표는 유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8

—둘째, 식민권력의 교육정책은 대체로 상당히 적극적인 동화 이념 및 공격적인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사회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냐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식민지 사회의 적극적인 요구 속에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이니셔티브 문제에서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한 상태, 다시 말해 헤게모니 경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서야 식민국가는 정책의 시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령, 1926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경우도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3.1운동 직후였는데요, 교육적 불평등 및 차별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인들의 엄청난 압력을 의식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총독부는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한 대학건설을 서둘렀습니다. 다른 식민지인 대만과 비교해도, 심지어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 설립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총독부가 서두르지 않으면 조선인 유지들에 의해, 혹은 조선인 지식인들과 결합한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먼저 대학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민권력의 굼직한 교육정책은 식민지 사회의 도전과 이로 인한 ‘헤게모니 경쟁’ 상황 속에서만 실제로 실행되었으며, 따라서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정책의 실행되는 상황, 식민지교육을 둘러싼 헤게모니적 경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

—셋째, 그렇기 때문에 식민권력의 교육정책은, ‘동화’라는 불가능한 목표에다 식민지사회의 도전에 직면해서만, 즉 헤게모니 경쟁 상황에서만 실행되는 수동성까지를 감안한다면, 액면 그대로의 지향이 아니라 식민국가의 헤게모니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그 교육정책의 특징을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령 일본의 식민주의를 단순히 ‘동화주의’로만 파악했을 경우,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 특히 식민지교육정책은 시종일관 ‘동화주의’로, 강도의 차이 이상으로 의미 있는 시기적 차이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민국가의 공식적 목표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일본인과 다름없는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일본인을 만든다, 즉 ‘동화=일본인화’와 식민통치에 대한 진정한 충성을 확보한다, 즉 ‘동의=헤게모니’는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양자 사이에는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포착됩니다. 즉, 식민국가의 헤게모니 전략으로서 ‘동화를 통한 헤게모니’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 없는 동화’나 ‘동화 없는 헤게모니’ 전략이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전략이 추구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말에 표에서 간략히 정리했지만, 식민권력의 교육정책을 이렇게 헤게모니 전략의 차원에서 본다면,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나 1936년 이후 황국신민화 시기 이후의 교육정책은 모두 강력한 동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화=일본인화 자체가 강제적인 목표로, 피식민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애초에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反 헤게모니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정치를 표방했던 1920년대와 내선융합과 농공병진을 표방했던 1930년대 전반의 교육정책은, ‘동화=일본인화’가 피식민자에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는 점을 ‘정책적 메리트’로 부여함으로써 피식민자의 자발적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헤게모니적 성격이 현저했지만, 메리트를 부여하는 방식의 차이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령, 20년대는 내지준거주의, 즉 일본 본토와의 제도적 동형화를 강력하게 추구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피식민자의 불만을 불식시키고자 했다면, 30년대 초반은 20년대만큼 큰 자원도 없고 이미 피식민자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만큼, 교육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식민지인들의 체제 내화시킨다는 것, 즉 먹고사니즘을 통해 자발적으로 식민통치의 현실을 묵인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했지요. 조선총독부가 20년대에는 제국대학처럼 ‘품 나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집중했다면, 30년대에는 오히려 간이학교의 확대 등 식민지 ‘공교육’망의 확대에 역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차이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지 않나 합니다.

#10~#18

—이하의 슬라이드는 구체적인 교육정책이 이렇게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름으로써, 기존의 무미건조한 교육정책의 나열을 넘어서, 이를 통해 식민국가의 작동방식이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와 특징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만,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던 부분과

접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식민교육의 문제는 해방 이후 어떤 포스트콜로니얼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간단히 다루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

— 식민교육이 남긴 유산이랄까, 과제와 관련해서는 해방 이후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오천석의 관점입니다. 그가 재미있었던 것은, 1946년의 시점에서 일본은 물러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속상태이며, 그 이유로 “우리 심적 생활에는 일본적 사상과 사색방법이 굳은 뿌리를 박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일본의 식민지교육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박사논문을 썼던 오천석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왕조 500년의 조선적 전제주의도 일본적 전제주의만큼이나 문제로 부상합니다. 우리는 일본적 전제주의와 조선적 전제주의의 동시 극복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교육을 포함한 전제주의 교육의 폐해로 우리는 민주적 생활의 경험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자멸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면, 그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대안 사태에서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오천석이 할 말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동화=일본인화’라는 공식적 목표는 사라졌어도, 강제와 동의의 장치로서 여전히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던 식민지교육의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국민국가의 장치 속에 어떻게 해체/변용/극복할 것인가라는 과제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눈여겨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송구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